

총 평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직 9급 행정학은 굉장히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평소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내용과 그간 기출 되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반복되었던 시험이었습니다.

A책형 기준으로 5번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문제와 16번 우리나라 정부회계 문제 정도가 변별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compass 행정학으로 공부한 수험생 여러분 모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시험의 영역과 범위를 잘 설정하고, 충실하게 반복했던 수험생들은 전혀 어려움없이 100점을 획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기본을 반복하는 학습법만이 합격을 위한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고, 이번 시험으로 실망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출제유형분석

총론	4	재무행정론	2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3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2	지방행정론	3

0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정책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집단의 합의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 ① 합리모형
- ② 최적모형
- ③ 점증모형
- ④ 만족모형

해설 ③ [O]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점증모형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접근방법으로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수정된 내용의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의 의사결정모형이다. 점증모형은 연속적·순차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눈덩이 굴리기식'의 결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정책의 축소와 종결이 어렵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246

▶ ③

02 주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책집행의 순응성 제고
- ②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
- ③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 ④ 행정적 비용의 감소

해설 ①, ②, ③ [○] 주민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미비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주체적 지위의 확보로 역량과 자질이 증대되고,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로 행정집행의 용이성(순응성)도 제고된다.

④ [×] 주민참여는 참여자의 전문성 부족과 참여의 비용 문제가 발생하며, 수많은 절차를 거치면서 행정지체와 비능률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813

▶ ④

0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 ②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을 지지한다.
-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해설 ① [○] 구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공식적 통치체제, 법구조, 행정조직에 한정된 것에 반해, 신제도주의에서는 비공식적 규범이나 제도, 정책구조 등 넓은 의미의 제도를 규정한다.

② [×] 신제도주의는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별 다양한 행정의 특성을 국가간의 제도적 차이로서 설명한다.

③ [×]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전체주의(holism)의 입장을 취한다.

④ [×]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하는 것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이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138, 139

▶ ①

04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형평성과 민주성을 추구한다.
- ② 행정관리 기제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 중심 관리를 추구한다.
- ③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예측과 예방을 중시한다.
-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민영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해설 ① [×]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추구한다.

② [○] 행정관리 기제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중심의 관리, 결과를 추구한다.

③ [×]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사후대처를 중시한다. 기업가적 정부는 예측과 사전예방을 중시한다.

④ [×]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정부의 독점적 공급과 행정메커니즘을 추구한다. 민영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가적 정부이다.

<전통적 관료제 vs 신공공관리론>

구분	전통적 관료제	신공공관리론
정부의 역할	노젓기(rowing) 역할	방향(steering)잡기 ⇨ 촉진(촉매)적 정부
정부의 활동	직접적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시민(주민)소유정부
행정의 가치	형평성과 민주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서비스	독점적 공급	경쟁도입 ⇨ 경쟁적 정부
공급방식	행정메커니즘	시장메커니즘 ⇨ 시장지향적 정부
관리기제	법령, 규칙중심의 관리	임무중심의 관리, 결과 중시 ⇨ 사명지향적 정부
행정관리방식	투입 중심 예산	성과 연계 예산(VFM의 강조) ⇨ 성과지향적 정부
	지출지향	수익창출 ⇨ 기업형 정부
	사후대처	사전예방 ⇨ 미래지향적 정부
	명령과 통제	참여와 팀워크 및 네트워크 관리 ⇨ 분권적 정부
행정 주도주체	관료 및 행정기관 중심 (계층제적 책임 확보)	고객중심 ⇨ 고객지향적 정부 (참여적 대응성 확보)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149

▶ ②

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② [×]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토대로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민간위원이 3/2 이상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및 종류〉

중앙·지방 자체평가	㉠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체평가 실시 ㉡ 재평가 : 국무총리는 자체평가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 실시
특정평가	국무총리는 국정 통합관리를 위해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시책 및 주요 현안시책 등에 대해 실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합동평가를 실시 가능
공공기관평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평가 실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공공기관 관리 법률에 의한 평가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295, 296

▶ ②

06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 ②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시민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해설 ③ [×]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오스본과 개블러의 정부재창론)의 특징에 해당한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151, 173

▶ ③

07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 ②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 ③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④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해설 ①, ②, ③ [○]

- ④ [×] 쓰레기통 모형은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에 관한 대표적인 모형이다. 상하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대학조직과 같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다당제인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나 의회·사법부·행정부 모두가 관련되는 결정 또는 행정부 내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정책결정 등에 쉽게 적용된다.

〈쓰레기통 모형〉

문제성 있는 선호	의사결정이 진행되면서 선호를 발견 (참여자가 스스로의 선호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
유동적 참여자	시간적 제약으로 참여자들이 유동적임
불명확한 인과관계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불분명한 지식과 기술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252

▶ ④

08 조직 구조 형태의 하나인 복합구조(matrix structure)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중간 정도의 크기일 것
- ②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산출의 변동도 빈번해야 한다는 이원적 요구가 강력할 것
- ③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일 것
- ④ 사업부서들이 사람과 장비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할 필요가 클 것

해설 ③ [×] 매트릭스 구조는 신축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예상치 못한 문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하는 조직이다. 조직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경우 효과적이며, 비밀상적 기술에 적합한 조직이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317, 328

▶ ③

09 다음의 동기부여 이론과 학자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인간의 욕구에는 존재, 관계, 성장 등의 욕구가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앨더퍼(Alderfer)이다.
- ㄴ. 욕구가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 계층에 차이가 있고, 학습된 욕구들을 성취, 권력, 친교 욕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맥클러랜드(McClelland)이다.
- ㄷ. 동기유발은 과업에 대한 개인의 기대감, 수단성, 보상의 유의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샤인(Schein)이다.
- ㄹ. 인간의 욕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때와 장소, 조직 생활의 경험, 직무 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한 학자는 헉맨(Hackman)과 올드햄(Oldham)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해설 ㄷ [×] 동기유발은 과업에 대한 개인의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브룸(Vroom)이다.

ㄹ [×] 인간의 욕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때와 장소, 조직 생활의 경험, 직무 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한 학자는 샤인(Schein)이다. 헉먼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은 직무의 특성이 직무수행자의 성장욕구 수준에 부합될 때 직무가 그 직무수행자에게 더 큰 의미와 책임감을 주고 이로 인해 동기유발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게 됨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383, 386 ~ 388

▶ ①

10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적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의 유해성에 주목하고 그 해소방법을 처방하는 데 몰두하였다.
- ② 행태주의 관점의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 ③ 갈등관리 전략으로서 조성전략은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에 입각해 있다.
- ④ 로빈스(Robbins)는 갈등관리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작용주의자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 해설** ① [O] 갈등에 대한 전통적 견해(고전적 갈등관리)에서는 갈등은 언제나 부정적 영향으로 인식하여 갈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② [X] 행태주의적 견해에서는 조직 내 갈등을 필연적으로 인식하고,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갈등이 조직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것은 1970년대 후반의 상호작용주의적 견해에 따른 것이다.
- ③ [O] 갈등의 조성전략은 조직의 생존, 발전에 불가결하거나 유익한 갈등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때의 전략을 말한다. 조성전략은 갈등에 순기능적인 것도 있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 ④ [O] 로빈슨은 갈등관리를 전통적 견해(~1940년 중반), 행태론적 견해(1940년대~1970년대), 상호작용론적 견해(1970년대 후반~)로 구분하였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408~410

▶ ②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집단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 ② 직업공무원제가 성공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에 유리하다.
- ④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

- 해설** ④ [X] 직업공무원제는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직업공무원제는 전문행정가의 양성을 저해한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442

▶ ④

12 영기준 예산제도(ZBB)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커진다.
- ② 최고관리자는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 ③ 예산과정에 대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 ④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 해설** ① [×] 공공부문에 있어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업무와 경직성 경비, 법령상 제약 등은 영기준예산제도의 적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 ② [○] 영기준예산제도는 대안의 분석 및 평가와 대안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을 통해서 합리적·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 ③ [○] 영기준예산제도는 의사결정 패키지의 작성과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 ④ [○] 영기준예산제도는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예산팽창, 예산 낭비 등을 억제할 수 있으며,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672

▶ ①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원칙은?

- 납세자의 지불능력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 세외수입 역시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① 신장성의 원칙
 ② 응익성의 원칙
 ③ 안정성의 원칙
 ④ 부담분임의 원칙

- 해설** ② [○] 응익성의 원칙이란 주민이 향유한 수익의 정도(공공서비스의 수혜정도)에 비례해서 지방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응능성(조세부담 능력에 비례한 조세부담 주의)가 원칙이지만, 지방재정은 응익성(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된다. <지방세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세원이 특정지역이 아닌 각 자치단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안정성의 원칙	세수의 연도별 격차가 심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원칙
신축성의 원칙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세목 등이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충분성의 원칙	세수가 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원칙
응익성의 원칙	주민이 향유한 수익의 정도에 비례해서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
분담성의 원칙 (부담분임의 원칙)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그 자치단체의 소요경비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주민세균등할)
형평성의 원칙 (부담보편의 원칙)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동등하게 과세하고, 조세감면의 폭이 너무 넓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827, 832

▶ ②

- 14**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통제자의 위치와 제도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	내부
공식적	(가)	(나)
비공식적	(다)	(라)

- ① (가) - 청와대에 의한 통제
 ② (나) -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③ (다) - 이익집단 및 언론에 의한 통제
 ④ (라) -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해설 ① [×] 청와대에 의한 통제는 내부-공식적 통제(나)에 해당한다.
 <Gilbert의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외부적 통제	내부적 통제
공식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일반적으로 의회소속)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 감사원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중앙행정부처
비공식	시민, 정당, 선거, 투표 이익집단, 여론, 매스컴, 인터넷	동료집단의 평가와 비판 공무원의 직업윤리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728

▶ ①

- 15** 롤스(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로서, 개개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②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는 저축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 원리’가 ‘기회 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해설 ④ [×]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내에서 충돌할 때에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Rawls 정의론의 내용〉

정의의 제1원리 기본적 자유의 평등(동등)원리	개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동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
정의의 제2원리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차등조정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차등의 원리 불평등한 상황의 조정시에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 해야 함.(최소 극대화의 원리 : maximin)
원리 간의 관계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에서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함. (① 기본적 자유의 평등 ⇨ ② 기회균등의 원리 ⇨ ③ 차등의 원리)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86

▶ ④

16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 ③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 ④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해설 ①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646, 654, 655

▶ ①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평정제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 ㄴ.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 혹은 처우 등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 ㄷ. 행정서비스에 관한 다방향적 의사전달을 촉진하며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ㄹ. 공무원의 능력, 근무성적 및 태도 등을 평가해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승진 및 보수 결정 등의 인사관리 자료를 얻는 데 활용한다.

- | | ㄱ | ㄴ | ㄷ | ㄹ |
|---------|---------|---------|---------|---|
| ① 역량평가제 | 직무성과관리제 | 다면평가제 | 근무성적평정제 | |
| ② 다면평가제 | 역량평가제 | 근무성적평정제 | 직무성과관리제 | |
| ③ 역량평가제 | 근무성적평정제 | 다면평가제 | 직무성과관리제 | |
| ④ 다면평가제 | 직무성과관리제 | 역량평가제 | 근무성적평정제 | |

해설 ㄱ - 역량평가제, 역량평가제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모의상황에서의 역할연기 등을 통해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ㄴ - 직무성과관리제(직무성과계약제), 직무성과관리제는 장·차관 등 기관 책임자와 실·국장, 과장 간에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관해 합의하여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의 직무성과계약에 의해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성과급,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ㄷ - 다면평가제, 다면평가제는 어느 개인을 평가하는 경우 직속상사만이 평가하는 일면평가가 아니라, 다수의 평가자가 다양한 방향에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면평가제는 행정서비스에 관한 다방향적 의사전달을 촉진하고, 상관에게만 복종하고 책임지는 데서 비롯된 관료적 병폐를 시정하여,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ㄹ -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이란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능력, 근무성적, 가치관 및 태도 등을 평가해 훈련수요를 파악하고, 승진·보수결정 등의 인사관리 자료를 얻고자 하는 인사행정상의 한 과정이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451, 491, 501, 505

▶ ①

18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다.
- ④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 ②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 ③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이다.
- ④ [○]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783, 799, 804

▶ ③

19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 전자전제주의(telefascism)가 나타날 수 있다.
- ②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 ③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해설 ② [×] 배제성이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의 재화 이용을 금지시키는 특성을 말한다. 정보관리의 배제성을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정보의 불균형과 정보격차의 발생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691, 692

▶ ②

20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ㄴ. 분배정책은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 ㄷ. 재분배정책에는 누진소득세,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 ㄹ. 재분배정책에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정책이 비하여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 ① $\neg$, $\perp$
② $\neg$, $\top$
③ $\perp$, $\top$
④ $\top$, $\bot$

해설 ㄱ [O] 분배정책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여러 대상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분배정책의 수혜자들은 서비스와 편익을 더 많이 배분 받으려고 다투게 되는 포크배럴이나 로 그롤링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 [X] 재분배정책이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ㄷ [○] 누진소득세,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이다.

ㄴ [X] 재분배정책은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이 낮고,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논쟁강도가 높다. 따라서 정책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간의 치열한 갈등이 발생한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184. 185

▶ ②